

월/요/광/장

박석두



쌀은 농가의 73%가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53%, 전체 농업생산액의 24%를 차지한다.

는 경우 그는 엄밀히 말하면 경작자라기보다 경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쌀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해법 뭘가

자 본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본인이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농사를 짓는다면 쌀 직불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아들이 분가하여 세대가 다른데 부모가 아들 명의의 농사를 짓는 경우 쌀 직불금은 부모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판매가격이 목표가격(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 80kg당 17만원)보다 낮은 경우 목표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된다.

쌀 직불금이 폭발적인 사회문제로 비화한 것은 부당 수령자 때문이다.

만여명 중 17만명에 달한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해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올해도 그에 해당하는 명단을 파악하고도 폐기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명단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부당 수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형사처벌하는 게 적절한 것일까? 쌀 직불금의 근거 법률인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조치로서 지급액을 환수하고 3년간 지급신청을 못하도록 하였다.

부당 수령자, 특히 농지의 실경작자가 따로 있는데 농지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그것은 곧 농지임대인이 분명하며, 농지임대자 중에는 '농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임대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서 농지를 강제해 처분하도록 하는 '농지처분명령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불법·부당 수령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처분명령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문화콘텐츠진흥원 이전 약속 지켜라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광주·전남 공동동혁신도시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이전 계획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다.

CT연구원 광주 설립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논의돼 왔다. 유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혁신도시 이전은 연구원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수차례 약속해왔다.

경제지표 '빨간 불' 불황 시작이라는데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성장에 그쳤다. 1분기 5.8%, 2분기 4.8% 등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3년만에 3%대로 추락한 것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 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 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의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

문화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을 지원 하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위에서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공동유치한 것은 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법조 칼럼

류재규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필수적으로,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진다.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다 반사다. 따라서 실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의 대다수는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군복무 중 공상 관련 법률 제정 필요

대한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다. 제대 이후에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의무이행기간 중 발생한 국민의 장애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1천324건(보훈관련 사건)이 심리돼 19건(1.4%)밖에 인용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인용률은 극히 미약하다.

이러한 군 복무 중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돼 있다.

행정소송 또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는 구조여서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단호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가

특히 화귀병이나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군에 입대한 지 1년 미만에 발병한 질병의 경우 군복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위기를 무시하 넘어기 위해서는 인류의 전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전통적인 삶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원리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려 우리의 생명력을 키운다면, 급변하는 지구 환경에도 살아남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과로와 관련한 질병약화나 발병에 대해서는 부대 업무와 관련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지 않아 같이 근무했던 주변인들의 진술에 주로 의지해야

광산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예방하고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토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위험한 동영상 당장 제재해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정보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동영상 항목의 'tv 캣' 카테고리 들어갔더니 '부탄가스로 로켓 만들기' 동영상에 눈에 들어왔다.

발시킨 후 그 추진력으로 수박을 박살내는 장면,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유유히 박살내는 장면 등이었다.

동영상 내용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부탄가스를 그대로 폭발시켜 공중에 날리는 장면, 수박을 한통 놓고 부탄가스를 폭

다며 털을 다 뽑은 진짜 생닭을 가져와 그 풍지에 부탄가스 통을 박은 후 모닥불에 달구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중으로 솟구치게 하는 예기적인 장면이었다.

동영상 내용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부탄가스를 그대로 폭발시켜 공중에 날리는 장면, 수박을 한통 놓고 부탄가스를 폭

다며 털을 다 뽑은 진짜 생닭을 가져와 그 풍지에 부탄가스 통을 박은 후 모닥불에 달구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중으로 솟구치게 하는 예기적인 장면이었다.

동영상 내용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부탄가스를 그대로 폭발시켜 공중에 날리는 장면, 수박을 한통 놓고 부탄가스를 폭

다며 털을 다 뽑은 진짜 생닭을 가져와 그 풍지에 부탄가스 통을 박은 후 모닥불에 달구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중으로 솟구치게 하는 예기적인 장면이었다.

기고

전갑길



우리 지구는 현재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 먼저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 바닷가 저지대의 상당 부분이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14명의 공무원으로 '그린 시티 광산' 전담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저탄소 인프라 구축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 홍보 활동 ▲사업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을 향하여

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생명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대문명 속에서 인간이 한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주 속에서 지구가 처한 환경이 그나마 양호했기 때문이다.

소은행시범단지로 지정된 신가동 신창호반3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각 동마다 1개소 이상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위기를 무시하 넘어기 위해서는 인류의 전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광산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예방하고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토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광산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예방하고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토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광산군 전 직원은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 실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광산군 전 직원은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 실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광주시 광산구청장〉

도·농 상생 프로그램 '1사1촌 농촌체험' 더 활성화되길

1사1촌 운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도시인들이 일년에 한두 번씩 집단으로 농촌을 방문하는데만 그치면 1사1촌은 큰 효과가 없다.

올은 64%, 대만은 78%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34%다. 농촌이 농외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것이 1사1촌을 통한 관광농촌 체험일 것이다.

1사1촌 운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도시인들이 일년에 한두 번씩 집단으로 농촌을 방문하는데만 그치면 1사1촌은 큰 효과가 없다.

올은 64%, 대만은 78%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34%다. 농촌이 농외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것이 1사1촌을 통한 관광농촌 체험일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웃 일본의 농외소득 비

▲유한관·광주시 서구 농성2동

無等鼓

독일과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프로이센 침략 이후 2차대전까지 150여년 동안 4차례나 큰 전쟁을 치른 양국관계였다.

랑스가 공동교과서 발행을 통해 잿빛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공동교과서는 세계적으로 첫번째 사례로 꼽힐 만큼 희귀한 경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만큼 이념적 혼란과 간극이 심한 나라도 드물다. 특히 신·경멸·증오 그리고 전쟁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교과서를 추방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2003년 1월 두 나라의 고등학생 550명이 엘리제조약(독일·프랑스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함께 '청소년의회'를 열었다.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간 연대일 뿐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간의 연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2006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근·현대사 공동교과서 총 3권이 출간됐다.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간 연대일 뿐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간의 연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2006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근·현대사 공동교과서 총 3권이 출간됐다.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간 연대일 뿐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간의 연대"라고 말한 바 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